

June 2026
No. 384

INSS

전략보고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對중국 외교와 전략 공간 확장

박병광
bcpark@inss.re.kr

- I. 서론
- II. 분석 틀: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 공간의 개념 구분
- III.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
- IV. 한중관계와 한국의 對중국 전략 공간
- V. 對중국 전략 공간 확장 방안 및 정책 실행 과제
- VI. 결론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對중국 외교와 전략 공간 확장

I. 서론

II. 분석 틀: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 공간의 개념 구분

III.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

1.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심화
2.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부상
3. 진영화와 다극화의 병존
4.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전략적 자율성 확대
5. 중견국 외교 공간의 변화

IV. 한중관계와 한국의 對중국 전략 공간

1. 한중관계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2. 한국의 對중국 전략 공간 제약 요인
3. 한국의 對중국 전략 공간 확장 필요성

V. 對중국 전략 공간 확장 방안 및 정책 실행 과제

1. 한국의 對중국 전략 공간 확장 방안
2. 한국의 對중국 전략 공간 확장 정책 실행 과제

VI. 결론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對중국 외교와 전략 공간 확장

저자 | 박병광

국문 초록

이 보고서는 전략 공간의 개념을 규정한 뒤, 한국이 직면한 전략 환경과 대중국 외교에서 직면한 전략 공간의 구조적 제약을 분석하고, 전략 공간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 공간'은 특정 국가가 국제체제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자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을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선택 가능성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략 공간의 확장'은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 외교적·구조적 여지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진영화와 다극화의 동시 진행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의 성격과 범위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중국 관계는 협력과 경쟁, 상호의존과 전략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경제 파트너이지만, 동시에 안보·규범 측면에서는 구조적 갈등 가능성을 내포한 대상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지속적인 딜레마를 야기하며, 전략 공간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공간 확장은 특정 정책 하나로 달성될 수 있는 단기 과제가 아니라, 외교·경제·안보·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대응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외교에서 전략 공간 확장의 핵심은 의존을 줄이면서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가운데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 공간 확장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역량과 정책 실행 능력이 결합된 종합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접근, 정부 내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민관 협력 강화, 그리고 정교한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주제어: 한중관계, 전략공간, 전략적 자율성, 미중경쟁, 대중국외교

I 서론

최근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 탈냉전 이후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중적 전략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하면서 이러한 ‘이중 구조’는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¹

특히 중국은 한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 반도체 공급망 재편, 대만 문제 등 핵심 사안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보다 명확한 전략적 정렬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정책 선택을 단순한 외교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고차원적 전략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점차 ‘수동적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사안별로 외부 압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일관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경제안보의 부상으로 인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이 외교적 갈등의 중심에 놓이면서, 대중국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 공간 확장’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 전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전략 공간 확장이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 영역에서의 과도한 의존과 제약을 완화하고, 협력과 경쟁을 보다 정교하게 분리·관리함으로써 정책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대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또는 ‘전면적 견제’라는 이분법적 틀로 접근하기보다, 사안별·분야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적 선택지를 확대하고 외부 압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 공간 확장을 논의하는 것은 미중 경쟁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을 설계하는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병행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두고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2025년 8월 2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694>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국 외교에서 전략 공간 확장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 공간의 개념을 규정한 뒤, 한국이 직면한 전략 환경과 대중국 외교에서 직면한 전략 공간의 구조적 제약을 분석하고, 전략 공간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분석 틀: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 공간의 개념 구분

본 연구는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 공간’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전략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행히 최근 한국 외교안보 담론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 공간’의 필요성이 점차 부상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은 흔히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선택 능력과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 공간이라는 두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초점과 성격이 다르다. 간단히 말하면 전략적 자율성은 ‘능력(capability)’의 문제이고, 전략 공간은 이러한 능력이 실제로 발휘될 수 있는 외부적 조건과 구조를 반영하는 환경과 선택지(scope)의 문제이다. 이 두 개념의 관계는 일방향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이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전략 공간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우선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은 외부 강대국의 압력이나 제약 속에서도 어느 한 나라가 자국의 기준과 국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내적 역량’에 해당한다. 예컨대 자주적 방위력, 공급망 안정성, 기술 경쟁력, 정책 일관성 등이 뒷받침되어야만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전략적 자율성은 “원한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²

전략 공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전략 공간은 전통적인 육지·해양·공중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된 국가 간 경쟁과 활동의 물리적·작전적 무대를 의미한다. 이는 군사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략적 경쟁의 범위가 다차원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가의 안보와 영향력이 행사되는 영역 자체가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³

둘째, 전략 공간은 특정 국가가 국제체제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자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을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선택 가능성의 범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옵션의 존재

2 전략적 자율성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European Parliament, “EU Strategic Autonomy 2013–2023: From Concept to Capacity,” *BRIFING*(July 2022), pp. 1–12; 한승완,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와 시사점』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p. 23–32.

3 물리적·작전 영역으로서의 전략 공간에 대한 개념은 다음을 참조. 조성렬, 『전략 공간의 국제정치』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6), pp. 9–16; Nadege Rolland, *Mapping China's Strategic Space*,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pecial Report No.111(September 2024), p. 6.

를 넘어, 강대국 간 경쟁, 동맹 구조, 경제적 상호 의존 등 외부 환경이 가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특정 영역에서의 물리적 존재 여부보다, 국가가 외부 압력과 제약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정책 옵션을 유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히 약소국 또는 중견국의 경우 전략 공간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다양한 외교 전략을 통해 확대될 수 있는 가변적이고 동태적인 영역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전략 공간의 확장이란 단순히 활동 영역의 외연을 넓히는 것을 넘어, 그러한 확장이 실제로 국가의 정책 자율성과 선택 가능성을 얼마나 확대시키는가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전략 공간은 후자를 의미한다.

한편, ‘전략 공간의 확장’은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가능한 외교적·구조적 여지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적 조건’ 또는 ‘활동 무대’에 가깝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며, 다양한 외교 채널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선택가능한 옵션의 수와 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즉, 전략 공간의 확장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얼마나 다양한가”라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선택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략적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략 공간이 넓어 보이더라도 실제로 활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다양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도 군사·경제적으로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중요한 순간에 독자적 선택을 하기 어렵다. 반대로 전략 공간이 협소하면, 자율성을 갖추고 있어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자체가 제한된다. 결국 정리하면 전략적 자율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전략 공간의 확장은 “그 결정을 펼칠 수 있는 무대와 선택지를 넓혀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외교의 과제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역량으로서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외적 환경으로서의 전략 공간을 넓혀가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 공간의 관계는 ‘능력과 기회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율성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 전략 공간은 그 선택이 실현될 수 있는 장(場)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외전략은 이 두 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되, 동시에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개념 구분을 넘어, 한국이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실질적인 선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석 틀이자 정책적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이 강조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 공간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이 처한 대미·대중 관계의 구조적 성격이 서로 다르

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에 대해 전략적 자율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한미관계가 기본적으로 동맹이라는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기대가 강하게 작용한다. 예컨대 대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등의 사안에서 한국은 동맹의 틀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⁴

이 경우 문제는 선택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선택지 중에서 독자적 판단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대미 관계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가’보다 동맹 속에서도 자국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즉 전략적 자율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된다.⁵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해서는 “같이 가되, 어디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 공간의 확장이 강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한중 관계가 동맹이 아닌 대신, 경제적 상호 의존과 비공식적 영향력에 기반한 제약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시장, 무역, 공급망, 산업 구조 측면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특정 사안에서 정책 선택의 폭을 사실상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자율성의 의지 이전에, 선택 가능한 옵션 자체가 충분히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중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정책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중국 관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의존 구조를 완화하고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것, 즉 전략 공간을 넓히는 것이 선행 과제가 된다.

또 하나의 차이는 ‘압력의 방식’에 있다. 미국은 동맹을 통해 제도화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중국은 경제·비공식 수단을 활용한 ‘회색지대’ 압박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제도 속에서의 협상력, 즉 자율성이 중요해지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구조적 노출을 줄이는 방향, 즉 전략 공간의 확장이 더 강조된다.

4 설인호, “미 대선 이후 한미동맹 대응전략 연구: 트럼프 1기 분석을 통한 2기 전망 및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Vol.42, No.3(2024), pp. 1-34; 심세현,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제145호(2018), pp. 179-208.

5 박용수, “트럼프 2기 이후 한미동맹의 재편과 중견국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모색,” OUGHTOPIA, Vol.40, No.3(2026), pp. 35-67; 이성현,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 외교: 전략적 자율성과 동맹 강화의 딜레마,” 『계간 외교』 제151호(2024.10), pp. 38-56.

요컨대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 속에서 얼마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전략적 자율성이 강조되고, 중국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와 대안 자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 공간의 확장이 강조된다. 결국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별개의 전략이라기보다, 한국이 처한 이중적 구조—안보 동맹의 제약과 경제 의존의 제약—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III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

오늘날 국제질서는 탈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다양한 권력 중심이 병존하는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세력 분포의 이동을 넘어 규범, 제도, 가치, 그리고 경제·안보 질서 전반에 걸친 구조적 재편을 수반하고 있다.⁶ 특히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진영화와 다극화의 동시 진행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의 성격과 범위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다.

1.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심화

국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 그 핵심은 ‘패권을 둘러싼 장기적 전략경쟁’에 있으며, 미중 경쟁은 체제, 가치, 기술, 군사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심화하고 있다.⁷ 이러한 경쟁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지니며, 향후 20~30년에 걸친 장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두 개의 백년’ 목표를 중심으로 일관된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군사적 억제와 경제·기술적 압박을 결합한 대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은 양국 경쟁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수출통제와 동맹 중심의 기술 블록화를 통해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립자강’을 강조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⁸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술 표준은 점차 분절되고 있으며, 향후 국제질서는 ‘누

6 ‘뮌헨 안보 보고서 2026(Munich Security Report 2026)’는 오늘날 국제질서가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으며, 기존 제도와 규범, 동맹 체계를 과감히 흔들고 재편하려는 이른바 ‘파괴적 정치(wrecking-ball politics)’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 보고서는 “아이러니하게도 1945년 이후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그 어느 나라보다 큰 역할을 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는 가장 두드러진 파괴자가 되었다”며, “그 결과 80년이 지난 지금 전후 국제질서가 실제로 해체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약화는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신뢰 붕괴와 맞물린 구조적 변화라는 것이 보고서의 인식이다. MSC, *Under Destruction: Munich Security Report 2026*(February 2026), <https://securityconference.org/en/publications/munich-security-report/2026/>

7 패권이란 국제질서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독점적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긴요한 가치, 목표 및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박병광, “바이트 행정부시기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제28권 2호(2021), p. 51.

8 김홍규·이병철,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 반도체 산업 동향,” 『국가전략』 제30권 4호(2024), pp. 5-32; 이민자, “중국제

가 기술과 규칙을 통제하는가'를 둘러싼 경쟁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다자주의, 규칙 기반 질서는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와 정책 변화로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과 다자체제에 대해 선택적으로 접근하면서, 기존 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⁹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 역시 점차 약화하고 있다. 강대국 간 경쟁의 심화, 국제규범의 정치화, 국제기구의 한계로 인해 국제 협력 체계는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보건, 안보 등 초국경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분쟁의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전면전보다는 장기화된 저강도 분쟁과 복합적 갈등이 지속되는 '영속적 불안정'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경계는 점차 흐려지고 있으며, 갈등은 종결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분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며, 군사·경제·기술이 결합된 복합적 경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국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미중 간 군사·안보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는 군사적 대치와 전략적 불신이 지속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고, 이는 역내 안보 환경을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¹⁰ 결과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영속적 불안정'의 안보 환경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는 동시에, 보다 정교하고 다층적인 균형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2.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부상

최근 국제질서 변화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의 부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는 기존의 효율성 중심 글로벌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니어쇼어링' 등의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 2025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현대중국연구』 제20권 4호(2019), pp. 1-40.

9 이상현, "서론: 2026년 국제질서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전망 2026-특집호-제1호』 (2025.12); 김도희 외,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對)주요국 전략,"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제174호(2025), pp. 1-2.

10 박병광, "한중관계와 한미동맹," 성균중국연구소 편, 『차이나 핸드북』 (서울: 후마니타스, 2025), pp. 555-558.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을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 역시 자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와 생산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안보의 부상은 국가 간 경쟁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¹¹ 과거에는 경제와 안보가 비교적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냉전 시기에도 군사·안보 경쟁은 치열했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효율성과 상호 이익을 중시하는 글로벌 분업 체제가 확대되었고, 국가 간 경제협력은 정치·안보 갈등과 일정 부분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었다. 특히 탈냉전 이후에는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은 주로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라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공급망 역시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구축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구분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첨단기술 패권 경쟁 등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오히려 국가안보의 취약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¹² 이에 따라 현재는 경제정책이 곧 안보정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투자심사, 기술 이전 제한,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국가안보 논리와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국가 간 경제 관계는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전략적 경쟁과 정치적 이해가 직접 반영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높은 무역 의존도와 특정 국가에 대한 산업적 의존 구조로 인해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전략 산업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 그리고 경제안보 전략의 체계적 구축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진영화와 다극화의 병존

- 현재 국제질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진영화와 다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

11 최윤정, “경제안보, 진영을 넘어 국익으로,” 『세종정책브리프』 No.2023-20(2024.1), pp. 1-34; 이효영, “경제안보의 개념, 진화와 전략적 함의,” 『미래성장연구』 8권 2호(2022), pp. 117-128.

12 OECD, *Economic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2025), pp. 8-9.

심화되며 새로운 형태의 ‘신냉전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제재, 그리고 이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다양한 대응은 이러한 진영화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¹³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인도, 아세안, 중동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성을 강화하며 다극화가 진전되고 있다.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 외교를 전개하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 역시 특정 진영에 완전히 편입되기보다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관계 정상화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며, 기존 질서와 다른 새로운 외교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¹⁴

아울러 최근 중동에서는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과 긴장 고조가 역내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으나,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UAE·카타르 등 주요 중동 국가들은 미·중·러 사이에서 실용적 균형 외교를 강화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제질서가 미·중 경쟁에 따른 진영화 흐름을 보이는 동시에, 지역 국가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는 다극화 현상 역시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정 이슈에서는 진영 간 대립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이슈에서는 국가들이 실용적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복합적 행태를 보인다. 예컨대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글로벌 공공재 이슈에서는 협력이 필요하지만,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영화와 다극화의 병존이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제공한다. 진영화는 선택의 압박을 강화하여 외교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반면, 다극화는 다양한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한다. 따라서 한국은 특정 진영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기보다, 사안별·분야별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전략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3 Ana Lorenzo López, “BRICS: The Emerging Bloc That Threaten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Global Security Review* (February, 2026), <https://globalsecurityreview.com/wp-content/uploads/2026/02/BRICSThe-Emerging-Bloc-That-Threatens-the-Liberal-International-Order.pdf>; Aaron L. Friedberg, “A World of Blocs,” *CSIS BRIEFS* (April 2023), <https://www.csis.org/analysis/world-blocs>

14 MSC, *Multipolarization: Munich Security Report 2025*, (February, 2025), <https://securityconference.org/en/publications/munich-security-report-2025/>

4.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전략적 자율성 확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¹⁵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세계 인구와 성장 잠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원자재, 시장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 에너지 자원,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중 모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는 국제규범과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개발협력, 디지털 거버넌스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이들 국가의 입장은 협상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과거 냉전기에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미·소 진영 중 하나에 편승하거나 비동맹이라는 제한된 선택지에 머물렀다면, 현재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훨씬 더 능동적인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요 국가들은 미·중 경쟁 속에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정렬되기보다, 사안별로 협력 대상을 선택하는 ‘선택적 연계(selective alignment)’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한국의 전략 공간 확대 가능성을 의미한다. 미·중 양자 구도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외교 협력은 한국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는 대체 생산기지이자 자원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5. 중견국 외교 공간의 변화

국제질서 변화는 중견국의 외교 공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규범과 제도를 활용한 다자외교를 통해 중견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러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강대국의 압력이 강화되며 중견국의 선택지가 제한되고 있다.

15 Guiyin Zhou, "Rise of Global South and change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order,"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Review*, Vol.6, NO.3(June 2024), pp. 1-20; Karim El Aynaoui, Paolo Magri, Samir Saran, *The Rise of Global South: New Consensus Wanted*, ISPI Annual Trends Report(December 2023), https://www.policycenter.ma/sites/default/files/2023-12/Annual%20Trends%20Report%202023-ISPI-ORF-PCNS_final.pdf

그러나 동시에 중견국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강대국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중재자, 조정자, 또는 규범 창출자로서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이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¹⁶

한국은 경제 규모와 기술력,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중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 간 경쟁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외교공간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외교의 적극적 활용, 중견국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규범과 제도 형성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가 요구된다.

결국 한국의 전략적 과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제약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미·중 경쟁, 공급망 재편, 진영화와 다극화라는 복합적 환경 속에서 한국은 보다 정교하고 다층적인 전략을 통해 자율성과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16 Anthony Dworkin, Rafael Loss, Jana Puglierin, “After the rupture: Middle power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order,” ECOR, *POLICY BRIEF*(February 2026), <https://ecfr.eu/wp-content/uploads/2026/02/After-the-rupture-Middle-powers-and-the-construction-of-new-order-v1.pdf>

IV 한중관계와 한국의 對중국 전략 공간

한국의 대중국 관계는 협력과 경쟁, 상호의존과 전략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경제 파트너이지만, 동시에 안보·규범 측면에서는 구조적 갈등 가능성을 내포한 대상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지속적인 딜레마를 야기하며, 전략 공간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1. 한중관계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한중관계는 지난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적 협력의 심화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에는 협력과 경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쟁적 상호의존’의 성격이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한중관계는 경제 중심의 실용적 협력 관계로 규정될 수 있었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정치·안보 요인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더 이상 단일한 협력 프레임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다층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¹⁷

무엇보다 경제적 상호 의존은 여전히 한중관계의 핵심 축이다.¹⁸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해 왔으며, 반도체, 화학, 철강, 중간재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다. 예컨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중국은 동시에 주요 생산 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의존은 점차 비대칭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며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특정 산업과 시장에서 대중 의존을 단기간에 축소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이 취한 비공식적 경제 보복 조치는 대표적인 사례다. 관광 제한, 한류 콘텐츠 통제, 롯데마트 영업 제한 등은 공식 제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는 경제적 상호 의존이 상호 이익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7 박병광, “한중 수교 30년의 의미와 과제,” 『국가안보전략』 통권 116(October 2022), pp. 24-26; 신종호, “한중관계 30년 평가와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 전망,” 『국가전략』 제28권 2호(2022), pp. 7-34 참조.

18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교역대상국 2위이며, 2025년 말 기준 교역액은 2,727억 달러(수출액 : 1,307억 8000만\$, 수입액 : 1,419억 5000만\$)이다.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

정치·외교 차원에서도 한중관계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정상 간 교류와 협력이 일정 시기 활성화되다가도, 특정 이슈를 계기로 급격히 경색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전략,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만 문제 등에서 양국 간 인식 차이가 확대되며 구조적 긴장이 심화하기도 했다. 이는 한중관계가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미·중 경쟁이라는 구조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외생적 민감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6년 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관계에 일정한 개선 신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¹⁹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하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관계의 구조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단기적으로는 관계 안정화와 갈등 관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한미동맹, 기술 경쟁, 대만 문제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관계 개선의 폭과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시각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는 평가될 수 있지만, ‘전략적 전환의 계기’로 보기는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중관계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안정 유지와 현상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불안정이 초래할 난민 문제, 지정학적 불안정, 미군 영향력 확대 가능성 등을 동시에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체제 붕괴를 방지하는 ‘이중 억제 전략’을 취하고 있다.²⁰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한편, 유사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서해 및 동북지역에서의 군사 활동, 정보·정찰 능력 강화, 신속 대응 역량 증대 등이 그 사례이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단순히 한반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변수이자 ‘전략적 경계선상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해양 진출의 관문이자 미국 동맹 네트워크의 전초선에 위치한 국가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자국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한다.

19 이재명 대통령 방중에 대한 평가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한권, “1·5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 『IFANS 주요국 제문제분석 2026-01』 (2026.1), pp. 1-20.

20 박병광,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pp. 45-47.

정치·안보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중 견제 구조에 편입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²¹ 특히 사드(THAAD) 배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미동맹 현대화 등을 ‘전략적 포위’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 대해 명시적 압박과 비공식적 신호를 병행하며 ‘선택의 비용’을 인식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중요한 공급망 파트너이자 기술 협력 대상이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상호 의존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전략적 완충 장치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기술 블록화가 심화할수록 한국이 어느 쪽에 더 깊이 편입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은 한국을 ‘완전한 적대국도, 완전한 협력국도 아닌 중간지대 국가’로 인식하며, 상황에 따라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한다. 즉,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미중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그 균형이 자국에 불리하게 기울 경우 이를 교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²²

결국 중국에게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 안정 유지라는 협소한 범주에 한정된 대상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확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 대해 ‘관리(management)와 견인(engagement), 그리고 필요시 압박(coercion)’을 병행하는 복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²³ 이러한 인식과 접근 방식은 오늘날 한중관계를 협력과 경쟁, 상호의존과 갈등이 중층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구조로 규정짓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정책 선택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 翟福生, “美韓同盟新調整及基限度,” 『現代國際關係』 2022년 第3期, p. 29; 孫茹·王付東, “美韓同盟涉華合作,” 『現代國際關係』 2021년 第8期, pp. 25-27.

22 “중 외교장관 왕이의 언중유골…‘미국에 너무 밀착 말라’ 견제,” 『한겨레』 2025년 7월 29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0485.html

23 일례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022년 8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마땅히 해야 할 5가지(五個應當)’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로 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압박을 담고 있다. 왕이가 요구한 5개 요구는 1)마땅히 독립자주 노선을 견지해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应当堅持獨立自主, 不受外界干攪) 2)마땅히 근린 우호를 견지해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应当堅持睦鄰友好, 照顧彼此重大關切) 3)마땅히 개방과 협력을 견지해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应当堅持開放共贏, 維護產供鏈穩定暢通) 4)마땅히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應當堅持平等尊重, 互不干涉內政) 5)마땅히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준수한다(應當堅持多邊主義, 遵守聯合國憲章宗旨原則) 등이다.

2. 한국의 對중국 전략 공간 제약 요인

한국의 대중국 전략공간을 제한하는 요인은 단일 변수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환경,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경제·산업 구조, 그리고 국내 정치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 제약은 단순히 선택지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실행의 비용과 위험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제약 요인은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이다. 양국 간 경쟁은 무역과 경제를 넘어 군사·안보, 첨단기술, 가치 규범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구조적으로 압축되고 있다.²⁴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중 견제 전략을 강화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협력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에 명확히 기울 경우 다른 한쪽으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한미동맹 또한 전략 공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이지만, 동시에 대중국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기술 견제 정책은 한국 산업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이 중국 내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처럼 안보협력과 경제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은 한국으로 하여금 고도의 정책 조정을 요구받게 만든다.

경제적 상호 의존 역시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특히 중간재 중심의 산업 구조는 중국의 생산 및 소비 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효율성과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외교적 갈등이 경제적 비용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나타난 비공식적 제재는 이러한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경제적 연결성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²⁵

지정학적 환경 또한 한국의 선택을 제한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한반도는 미·중 경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라는 고유한 안보 변수가 중첩되어 있다. 한국은

24 박병광, “미중 패권 경쟁과 우리의 대응 방향,” 『INSS 전략보고』 No.67(Febuary 2020), pp. 10-11.

25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對한국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병광, 『중국의 주변국 경제보복 사례와 시사점』(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pp. 93-101.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동시에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배제하기 어렵다.²⁶ 이러한 구조는 대중국 정책에서 일관된 방향 설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도 전략 공간을 축소시키는 중요한 변수이다.²⁷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과 같은 핵심 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면서, 산업 정책과 외교 정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미국은 기술 동맹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고, 중국은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편입되지 않도록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 또한 간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다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기존의 다자주의와 국제규범의 조정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며, 강대국 간 힘의 논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중견국인 한국이 규범과 제도를 활용하여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보다, 구조적 압력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내적 요인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대중국 인식의 악화와 정치적 양극화는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외전략이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이해관계의 충돌은 일관된 대중국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내부 변수는 외부 압력과 결합하여 전략 공간을 더욱 협소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역시 중요한 구조적 제약이다. 각국이 경제 안보를 강조하며 공급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기존의 효율성 중심 분업 체제와 새로운 안보 중심 구조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현실은 정책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외부의 전략적 경쟁, 동맹 구조, 경제적 연계, 지정학적 조건, 기술 경쟁, 국제질서 변화, 그리고 국내 정치·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 공간은 구조적으로 제약

26 이동률, “한중 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 및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3호(2018), pp. 151-178; 박병광,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pp. 119-120.

27 Marianne Schneider-Petsinger, Jue Wang, Yu Jie and James Crabtre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Quest for Global Technological Leadership*, (London: Chatham House, 2019), <https://www.chathamhouse.org/sites/default/files/CHHJ7480-US-China-Competition-RP-WEB.pdf>, 박성준 외, 『미중 기술 패권과 한국의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1-15호(2021.12),

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약이 단순히 선택지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선택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동시에 증대시킨다는 데 있다.

결국 한국은 단순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선택의 폭을 어떻게 관리하고 확장할 것인가라는 보다 정교한 전략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외교, 안보, 경제, 기술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전략공간의 확보는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역량 축적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중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對중국 전략 공간 확장 필요성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전략 공간의 확장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정책 자율성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요구에 기인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핵심 경제 파트너인 동시에 잠재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책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전략 공간 확장은 필수적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 구조와 비대칭성은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높인다. 한국은 수출, 중간재 공급망, 제조업 가치사슬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평시에는 상호 이익을 창출하지만, 정치·안보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제약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사드(THAAD) 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경제적 상호 의존이 반드시 상호 호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은 정책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전략 공간의 확장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영향력 행사 방식의 변화도 중요한 배경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군사력뿐 아니라 시장 접근, 규제, 비공식적 제재 등 다양한 ‘회색지대’ 수단을 활용하여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⁸ 이러한 방식은 명시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의 정책 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한국이 이러한 압력에 일방적으로 노출될 경우, 외교적 선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대체 경로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전략 공간을 넓혀야 한다.

셋째, 가치와 규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긴장 역시 전략 공간 확장을 요구하는 요인이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서 미국 및 서방과 규범적 공통성을 갖고 있

28 정지현 외,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박병광, 『중국의 해외영향력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지만, 중국과는 정치체제와 국제질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인권, 대만, 남중국해와 같은 사안에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정 사안에서 어느 한쪽 입장을 따를 경우 다른 한쪽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가 필요하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심화도 중요한 배경이다.²⁹ 기술, 공급망, 군사, 이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확산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점점 더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때 전략 공간이 협소한 국가는 외부 압력에 의해 특정 진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외교적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전략 공간을 확장한 국가는 다양한 선택지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의 전략적 가치와 협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섯째,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이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다.³⁰ 특정 품목이나 시장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전략 공간 확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하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전략 공간의 확장을 추구한다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되 그로 인해 정책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구조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특정 사안에서 중국의 입장이나 압력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을 피하고, 다양한 대안과 파트너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다.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전략 공간 확장은 한국 외교의 ‘대중국 거리두기’가 아니라, 대중국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관리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능동적 전략이다. 이는 미·중 경쟁이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한국이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행위자로 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외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기도 하다.

29 MICHAEL J. MAZARR, *Understanding Influenc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Santa Monica: RAND, 2021),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research_reports/RRA200/RRA290-1/RAND_RRA290-1.pdf ; Leah Bitounis, Jonathon Price(eds.), *The Struggle for Power: U.S.-China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Aspen Institute, 2020).

30 조은교,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7), pp. 17-25.

V 對중국 전략 공간 확장 방안 및 정책 실행 과제

1. 한국의 對중국 전략 공간 확장 방안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심화와 국제질서의 전환 속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공간은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공간의 확장은 단순히 외교적 선택지를 늘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과 정책 실행 역량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 경제, 안보, 기술, 규범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전략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첫째, 외교적 다변화와 네트워크 확장은 전략 공간 확대의 출발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정책 선택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외교적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³¹ 특히 일본, 아세안, 인도, 중동, 유럽연합(EU) 등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심화함으로써 미·중 양자 구도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들과는 공급망 협력과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EU와는 탄소중립, 기술 표준, 데이터 규범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역시 자원 확보, 시장 다변화, 외교적 지지 기반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다층적 네트워크는 특정 사안에서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완충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경제안보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은 전략공간 확대의 핵심 기반이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공급망을 다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남아, 인도, 호주, 중동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체 생산기지와 자원 조달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배터리 산업에서는 니켈과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인도네시아, 호주 등으로 다변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대만,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³²

31 김성배·윤정현·백선우, “중견국 연대 외교: 가치·규범 중심 중견국 외교를 넘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833호(2026.4.16.) 참조.

32 일례로 타이완(臺灣)의 대중국 투자 비중은 2010년 약 84%에서 최근 3%대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 자리를 미국과 동남아 투자가 대체했다. 대외 무역에서도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20년 40%대에서 2025년에는 20%대로 급감하면서 AI와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타이완이 ‘탈중국화’와 ‘시장 다변화’라는 대대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臺灣財政部統計處, 『114 年我國進出口貿易概況』(115 年 2 月 23 日), P. 7. <https://service.mof.gov.tw/public/Data/statistic/bulletin/11>

셋째,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조적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전략 공간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외부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양자기술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반이 구축될 때 한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보다 자율적인 정책 선택이 가능해진다.

넷째, 안보 차원에서의 균형적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를 대중국 관계와의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동맹을 기반으로 억제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갈등 관리와 제한적 협력을 병행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응하되, 기후변화, 보건, 환경,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유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고 정책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규범과 가치 외교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예컨대 인권, 디지털 규범, 기술 표준 등에서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되, 외교적 표현과 실행 방식에서는 전략적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선택적·원칙적 대응(selective principled approach)'이라 할 수 있으며, 가치와 실용의 균형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³³

여섯째, 위기관리 및 리스크 대응 메커니즘 구축이 필수적이다. 사드(THAAD)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정 국가의 비공식적 제재나 공급망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관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교 채널에서도 고위급 및 실무급 소통을 상시화하여 갈등이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5/114%E5%B9%B4%E6%88%91%E5%9C%8B%E5%87%BA%E9%80%B2%E5%8F%A3%E8%B2%BF%E6%98%93%E6%A6%82%E6%B3%81.pdf (검색일: 2026.4.9).

33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가치와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원칙 기반 실용주의'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고, 개방성, 포용성을 내세우면서도, 구체적 사안에서는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 공간 확장은 국내적 기반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대중국 정책이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흔들릴 경우, 대외 신뢰성이 저하되고 전략적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익 중심 대중국 외교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하면, 한국의 대중국 전략공간 확장은 특정 정책 하나로 달성될 수 있는 단기 과제가 아니라, 외교·경제·안보·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대응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핵심은 의존을 줄이면서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가운데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때 한국은 미·중 경쟁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외교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對중국 전략 공간 확장 정책 실행 과제

전략 공간 확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선언적 목표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계별 로드맵, 정부 내 조정 메커니즘, 민관 협력 체계,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1) 단기·중기·장기 전략 로드맵의 체계적 구축

- 단기(1~2년 리스크 진단과 대응 기반 마련: 단기 과제의 핵심은 대중국 의존도의 정밀한 구조 진단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배터리 핵심광물, 석유화학 중간재 등 품목별로 중국 의존도와 대체 가능성을 수치화한 ‘공급망 취약성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반도체·에너지·핵심광물 분야별로 구축하고, 경보 단계에 따른 정부·기업 공동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고위급 및 실무급 소통 채널을 이중으로 안정화하여 돌발적 갈등이 경제 분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기(3~5년) 구조적 의존 완화와 대체 기반 확충: 중기 과제는 공급망 다변화를 실질적 구조 전환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아세안, 인도, 중동,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양해각서(MOU) 수준을 넘어 구체적 투자 프로젝트와 제도적 프레임워크로 심화해야 한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특정 국가와의 장기 공급 계약, 현지 합작 개발, 전략 비축 확대를 병행하는 ‘3중 확보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 협력의 측면에서는 미국·EU·일본과의 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 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함으로써 기술 생태계의 연결망을 다양화하고, 중국 중심의 단일 기술 의존 구조

에서 벗어나는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민간의 자발적 다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장기(5~10년) 기술 주권 기반의 구조적 자율성 확보: 장기 목표는 기술 경쟁력 자체를 외교적 레버리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첨단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차세대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기술 제재나 공급망 압박에 대한 구조적 내성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에서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기술 주권 로드맵’을 산업별로 수립하고,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장기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 기술력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략 기술의 대외 협력 조건을 외교 전략과 연동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2)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거버넌스 개선

- 대중국 전략 공간 확장은 외교·안보·산업·통상·과학기술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복합 과제다.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충되는 메시지와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 전략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차관급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대중국 정책뿐 아니라 미중 경쟁 대응, 공급망 관리, 기술 전략을 통합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각 부처의 대중국 관련 정책이 전략적 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전략 정합성 심사’ 절차를 도입하여, 개별 부처의 단기적 이해관계가 국가 전략의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별 대중 의존도, 공급망 리스크, 기술 경쟁력 수준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설계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3) 민간 협력 및 산업계 연계 강화

- 대중국 전략 공간의 실질적 확장은 결국 기업 활동의 영역에서 구현된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편입되어 있어 정부 전략과 기업 전략 간의 정합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 우선 기업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전략 설계의 공동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산업별 민간 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규제 환경 변화, 시장 접근성, 기술 협력 조건 등 현장 정보를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피드백 루프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핵심광물 확보 분야에서

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지분을 공동 출자하는 ‘전략광물 공동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자원 확보 리스크를 분산하고,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대기업과 달리 독자적인 해외 네트워크와 정보력이 부족한 이들 기업에게는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현지화 컨설팅, 무역금융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접근이다.

4) 외교 메시지 및 전략 커뮤니케이션 정교화

- 동일한 정책이라도 메시지의 표현과 전달 방식에 따라 상대국의 인식과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 한국의 전략 공간 확장이 중국의 불필요한 반발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보다 정교한 전략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 대외적으로는 ‘배제가 아닌 다변화’, ‘반중이 아닌 원칙 기반 자율성’이라는 일관된 프레임을 유지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나 공급망 협력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편적 초치임을 반복적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대중국 메시지에서는 원칙과 유연성을 병행하는 이중 접근이 요구된다.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되, 협력 가능한 분야인 기후변화, 보건, 문화 교류 등에서는 실용적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식 외교 채널 외에 트랙 1.5 및 트랙 2 대화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여, 전략적 오해를 사전에 해소하고 양국 간 정책 간극을 관리하는 비공식 채널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대중국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 정책 일관성의 토대가 된다. 전략적 자율성 추구의 필요성, 단기적 비용, 장기적 이익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의 대중국 전략 공간 확장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역량과 정책 실행 능력이 결합된 종합 과제다. 단계별 로드맵에 기반한 체계적 접근,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민관 협력 강화, 정교한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네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한국은 미중 경쟁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전략 공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은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전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탈냉전 이후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과 번영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질서는 진영화와 다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며, 미중 경쟁은 단순한 세력 경쟁을 넘어 기술 패권, 공급망 통제, 군사안보 경쟁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장기적 전략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기존의 단순한 균형적 접근만으로는 국가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국 전략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 공간’을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전략적 자율성이 외부 압력 속에서도 자국의 국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의 문제라면, 전략 공간은 그러한 선택과 행동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외부 환경과 선택 가능성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전략 공간의 확장이란 이러한 선택의 폭과 외교적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 공간의 확장은 상호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동되는 관계이며, 전략적 자율성이 강화될수록 전략 공간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가 중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 공간의 확장이 보다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구조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이라는 비대칭 구조 속에서 자율적 선택 능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며,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정책 선택지와 외교적 여지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전략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량과 공간을 동시에 관리하는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전략 공간은 여러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우선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한국의 외교적 선택 폭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기술동맹, 공급망 재편을 통해 동맹국의 전략적 정렬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경제적 영향력과 회색지대 압박을 활용하여 주변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북핵 문제와 한반도 지정학, 기술 패권 경쟁, 경제안보의 부상은 한국의 정책 선택을 더욱 복잡적이고 어려운 문제로 만들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 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면서, 대중국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을 설계하는 국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 공간의 능동적 확대가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첫째, 외교 다변화와 중견국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호주, 중동,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다층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교역 시장 다변화 차원을 넘어,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완충 공간을 확대하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규범, 방산,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견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한국은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교 다변화는 단순한 관계 확대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를 늘리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기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보호 및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외교·안보적 압박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급망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는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넘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자율성과 협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되 이를 대중국 관계와의 제로섬 구조로 접근하지 않는 균형적 전략이 필요하다. 즉, 안보 영역에서는 동맹을 기반으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보건·환경·경제 등 비전통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동맹과 대중국 관계를 상호 배타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병행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안보는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유지하되 경제·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실용적 협력을 지속하는 ‘분야별 분리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불필요한 전략적 소모를 줄이고, 외교적 유연성과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넷째,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 역시 대중국 전략 공간 확장의 중요한 레버리지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최근 한일관계는 안보·경제·기술 협력의 필요성 속에서 점진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양자관계 개선 차원을 넘어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확대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경제안보, 해양안보 등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을 배제하거나 대결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라기보다, 한국이 외교적·전략적 선택지를 다층화함으로써 대중국 외교에서 협상력과 자율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략 공간의 확대가 단순히 외교적 수사나 선언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략 공간은 궁극적으로 국가 역량에 기반한다. 자주적 방위력, 경제안보 역량, 기술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 사회적 통합과 정책 일관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략 공간은 쉽게 외부 압력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략 공간의 확대는 외교정책 차원을 넘어 산업·기술·안보·경제 정책이 통합적으로 결합된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대중국 전략은 단순한 친미·친중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과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 공간을 동시에 확대함으로써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동맹을 기반으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다변화와 경제안보 역량 강화, 중견국 협력 확대, 그리고 원칙 기반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결국 전략 공간의 확대란 단순한 외교적 여유의 확보가 아니라, 불확실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한국이 스스로의 선택을 설계하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문 문헌

- 김도희 외.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對)주요국 전략.” 『NARS 입법·정책』 제174호, 2025.
- 김성배·윤정현·백선우. “중견국 연대 외교: 가치·규범 중심 중견국 외교를 넘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833호, 2026.
- 김한권. “1·5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 『IFANS 주요국제 문제분석 2026-01』, 2026.
- 김흥규·이병철.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 반도체 산업 동향.” 『국가전략』 제30권 4호, 2024.
- 박병광.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_____. 『중국의 해외영향력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 _____. “한중관계와 한미동맹.” 성균중국연구소 편. 『차이나 핸드북』. 서울: 후마니타스, 2025.
- 박성준 외. 『미중 기술 패권과 한국의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1-15호, 2021.
- 박용수. “트럼프 2기 이후 한미동맹의 재편과 중견국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모색.” 『OUGHTOPIA』 Vol.40, No.3, 2026.
- 설인효. “미 대선 이후 한미동맹 대응전략 연구: 트럼프 1기 분석을 통한 2기 전망 및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Vol.42, No.3, 2024.
- 심세현.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제145호, 2018.
- 이동률. “한중 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 및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3호, 2018.
- 이민자. “중국제조 2025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현대중국연구』 제20권 4호, 2019.
- 이상현. “서론: 2026년 국제질서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전망 2026-특집호-제1호』, 2025.
- 이성현.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 외교: 전략적 자율성과 동맹 강화의 딜레마.” 『계간 외교』 제151호, 2024.
- 이효영. “경제안보의 개념, 진화와 전략적 함의.” 『미래성장연구』 제8권 2호, 2022.
- 정지현 외.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 조은교.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년 7월.
- 최윤정. “경제안보, 진영을 넘어 국익으로.” 『세종정책브리프』 No.2023-20, 2024.
- 한승완.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와 시사점』.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2. 영문 문헌

European Parliament. “EU Strategic Autonomy 2013-2023: From Concept to Capacity.” BRIEFING, July 2022.

Friedberg, Aaron L. “A World of Blocs.” CSIS Briefs, April 2023.

López, Ana Lorenzo. “BRICS: The Emerging Bloc That Threaten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Global Security Review, February 2026.

MSC. Multipolarization: Munich Security Report 2025. February 2025.

MSC. Under Destruction: Munich Security Report 2026. February 2026.

OECD. *Economic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2025.

Schneider-Petsinger, Marianne, Jue Wang, Yu Jie, and James Crabtre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Quest for Global Technological Leadership*. London: Chatham House, 2019.

3. 중문 문헌

翟福生, “美韓同盟新調整及基限度,” 『現代國際關係』 2022年 第3期.

孫茹·王付東, “美韓同盟涉華合作,” 『現代國際關係』 2021年 第8期.

臺灣財政部統計處, 『114 年我國出進口貿易概況』 2025年 2月 23日.

Abstract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 China and the Expansion of Strategic Space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ARK Byung-Kwa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report aims to present ideas for expanding South Korea's strategic space in its diplomacy toward China. It begins by defining the concept of strategic space, then analyzes the structural constraints on South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limitations on its strategic space in relations with China, before proposing pathways for expanding that space.

Strategic space refers to the room a state retains to make autonomous policy choices even under pressure from major external powers. The expansion of strategic space means structurally broadening the range of such choices and enhancing diplomatic autonomy. The deepening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restructuring of global supply chains, and the simultaneous emergence of bloc formation and multipolarity are fundamentally transforming South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environment — and, with it, the nature and scope of the strategic space available to Seoul.

Expanding strategic space vis-à-vis China means creat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South Korea's policy is not automatically determined by Chinese positions or pressure on any given issue, but can instead be shaped through independent judgment backed by a diverse range of alternatives and partners. South Korea needs to transition from being a state that is forced to choose to one that is capable of designing its choices. This requires, above all, the proactive expansion of strategic space, and several core tasks emerge as essential to that effort.

First, diplomatic diversific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middle-power networks are essential. Second, economic security and supply chain stabilization must be pursued systematically as a matter of national strategy. Third, while the US-ROK alliance should b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a balanced approach is needed — one that does not frame the alliance in zero-sum terms against the relationship with China. Fourth, the stable management of South Korea-Japan relations should also be leveraged as an important asset in expanding strategic space toward China.

In conclusion, expanding strategic space toward China must be approached not merely as a matter of foreign policy, but as a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that integrates industrial, technological, security, and economic policies in a coherent and mutually reinforcing framework.

Keywords: strategic space, strategic autonomy, ROK-China relations, diplomacy toward China, economic security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June 2026
No. 384